

일시 : 2014. 11. 18. (화) 오후 2시~4시

장소 : 서울시청 서소문 청사 4층 후생동강당

주제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의의와 입법쟁점

좌장 : 이주원 두꺼비하우징 대표

발제 : 김혜원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패널 : 변형석 서울사회적기업협의회 대표

이성수 한국마이크로크레딧 신나는조합 상임이사

초청 : Francois Comet of the Groupe SoS

Maria Ubarrechena of the Spain / Baspue

#### [발제문]

#### ◆ 한국적 맥락의 특수성과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필요성

○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성장은 서구의 사회적 경제 조직의 발달 궤적과 공통적인 측면을 포함하면서도 정부의 정책 사업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차별적 특징을 가지고 있음.

- 전 세계 유례없는 급속한 고도성장과 국가 중심적 사회경제정책 운용에 의해 전통적 경제 원리는 급속히 해체되고 소농과 근로자의 자발적 대응 역시 억압되었음.
- 서구에 비해 협동조합 주도의 사회적 경제는 과소 발전하였음.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된 조직들은 양적으로 성장하였으나, 이들 조직들이 호혜성과 미션 지향성 중심으로 발전하기보다는 국가에 의해 관리되고 통제되었으며 이에 순응하는 행태가 지배.

○ 기존의 정형화된 국가 사무의 대행이라는 틀에 갇혀 있지 않는 다양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기존의 정부 순응적인 조직과 차별화되는 새로운 조직들이 등장하면서 사회적 경제의 주체가 형성되기 시작함.

- 복지부의 자활사업 수행에 따른 자활공동체, 노동부의 사회적일자리사업 수행에 따른 사회적 일자리 사업기관, 안행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따른 지역공동체 조직, 커뮤니티 비즈니스 조직 등임.

- 이들 조직이 성장한 계기는 외환위기 이후 15년간 우리 정부가 복지재정을 확대하면서 정부 재정에 의한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 확충 사업을 새로운 조직을 육성하면서 확대해 왔던 것임.
- 도시와 농어촌의 피폐화된 공동체를 복원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국토부의 도시 재생 사업 등의 형태로 진행되었고 이 역시 새로운 조직을 성장시키는 계기였음.

○ 이들 조직은 성숙된 시민사회 역량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의 주체로 성장하여 사회 문제 해결의 파트너이자 혁신자로 등장하고 있음.

- 사회적 경제 조직 스스로 주체를 의식하고 활동하고 연대하고 있음.
-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및 시행의 5년의 역사에 더하여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은 법적 실체를 제공하여 조직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했음.
- 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경제에 대한 대중적 참여와 관심이 달라지고 있음.
- 이제는 단순히 정부의 사업 수행기관을 육성하는 차원이 아니라, 공공영역과 시장영역과 다른 또 하나의 영역인 사회적 경제가 독자적인 영역으로 등장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사회적 경제 영역의 건강한 발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 이러한 시점에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기업을 각각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을 포괄하는 사회적 경제를 사회적으로 승인하는 것이 요구됨.

- 사회적 경제 조직은 경제 활동에 있어서 불완전하거나 임시적이거나 경계에 있는 조직이라는 시선에 시달려 왔으나 이제는 그 자체로 온전히 인정받아야 함.
- 정부 정책 및 사업 관련 법률에 의해 구성되고 정의되는 조직이 아니라 그 자체로 원리를 토대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조직으로 인정되어야 함.
- 사회적 경제 조직이 시장 경제 내의 경제 활동과 정부 사업과 관련된 경제 활동에서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하게 대우받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일부 영역에서는 사회적 경제 조직의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여에 입각해 우선적 지위를 부여 받을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과 같은 기본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 실체를 선언하는 것이 필요.

○ 정부 부처와 지자체는 정책 사업이 사회적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사업을 기획, 운영 하고 있음.

- 정부 부처가 자기 사업 중심의 폐쇄적 사업 운영을 하게 되면 지역의 사회적 경제 조직은 경쟁하는 부처 사이에서 눈치를 봐야 하고 관료적인 형식적 규칙이 양산되는 결

과를 빚게 됨.

-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으로 설계된 사업의 빈틈과 허점으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과잉되거나 중복된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정부 부처별로 독자적인 전달체계를 만들고 지원체계를 만들게 되면 사회적 경제 조직 공통의 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것에 비해 비효율적이고 중복되는 예산낭비를 낳게 됨.
- 이러한 문제점은 2000년대 이후 관련 정책 사업이 확대되면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나 제대로 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음.

○ 이상과 같이 우리나라가 사회적 경제에 정부의 정책 사업이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진흥의 선언만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사업의 거시적인 통합적 조율을 가능케 하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어 왔음.

- 이를 지지하는 측은 2011년 청와대 중심의 부처 협의를 통한 사회적 기업 정책의 조율 노력이 일정 부분 성과를 내기도 했으나 목적인 성과를 충분히 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를 법률에 명기하는 방식의 보다 강한 정책적 드라이브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영국의 경우에도 사회적기업과가 통상산업부 내에 설치되었다가 사회적기업이 다양한 부처와 접촉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수상 직속의 내각부로 이관되었음.
- 하지만 정책적 조율을 담보하기 위해서 어떤 수준의 조치가 필요한지 그리고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어떤 수위로 담겨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음.
- 선언적인 조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차원에서부터 조정을 위한 행정체계와 지원체계까지 명기하는 것까지 다양할 수 있음.

○ 사회적 경제의 자생적 발전에 기초한 민간 자원의 규모 및 네트워크가 미비하게 발전해 있고 공공의 이해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책적 개선 요구가 기본법 제정 논의에 포함됨.

- 해외 사례에서는 구체적인 진흥 정책에 대한 조항이 기본법에 없으므로 이는 한국적 특수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임.
- 일부에서는 기본법에서 우선구매제도나 금융기금과 관련된 실질적 조치를 가능케 하는 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다른 일부에서는 진흥의 실질적 조치는 기본법 아래 별도의 법률 제정을 통해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 움직임은 진흥을 위한 실질적 조치의 법적 기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 ◆ 법안 주요 쟁점

○ 시대적 요청을 담아 여야를 막론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을 제출하였음.

- 2014년 4월 30일 여당인 새누리당이 66명이 서명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함.  
2014년 10월 10일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음.
- 2014년 11월 11일 정의당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음.
- 국회 내에서 세 가지 법안을 함께 검토하여 수정대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됨.
- 이하에서는 수정대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논의될 쟁점을 검토함.

### ○ 기본법의 성격

-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기본법의 역할을 넘어 실행법적 내용을 담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여부가 주요 쟁점임.
- 기본법은 정책의 지향점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주로 해야 되는데 실제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적경제기본법안들 내에서는 기금 설치나 공공구매의 우선구매 등 실행법에 담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

기본법의 성격에 대한 쟁점인 기금 설치, 공공기관 우선구매 등의 실행법적 내용은 주요 쟁점 가운데 ‘○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정책’의 법안 내용과 동일하여 그 부분에서 법안 내용을 다루기로 함.

### ○ 기본법 제정의 목적

- 새누리당 안의 제정 목적은 사회적경제 기본법이 최종적으로 우리 사회에 기여할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음. 즉,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이바지함이 목적으로 서술됨.
- 새정치민주연합 안과 정의당 안의 제정 목적은 유사한 내용의 사회적 기여를 강조하고 있긴 하지만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는 것 자체로 서술되어 있음.

### [1] 새누리당(안), 2) 새정치민주연합(안), 3) 정의당(안)]

**1)**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통합생태계와 통합적인 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경영의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도모함으로써 양극화 해소, 건강한 공동체의 조성 및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이 법은 국민경제의 균형발전과 국가공동체발전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민·관 협치를 기반으로 한 효과적인 정책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3)** 이 법은 사회적경제의 고용 및 복지 개선, 건강한 공동체 조성 과 국민경제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고 사회적경제의 기본원칙에 따른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원칙과 목적에 따른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

- 사회적경제 조직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은 거의 유사함. 외국의 사례와 동일하게 운영원칙으로서 민주적 의사 결정, 사회적 목적의 추구, 지분에 근거한 배분과 구별되는 경제적 성과 배분의 원리, 국가로부터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있음.
- 사회적경제 조직의 구체적 범위를 법 내에 명시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일부에서는 운영원칙을 기술하는 수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법에 명시되지 않으면 관련 중앙부처가 자신들은 제외되어야 한다고 저항할 수 있고 이것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통합적 정책 추진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구체적인 열거 방식에 모든 당의 법안이 동의하고 있음.
- 사회복지법인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을 포함한 새누리당 안에 비해 이를 배제한 야당 안은 법 제정 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임. 이들 조직의 지배는 국가로부터 독립적이면서 민간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경제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에 포함될 수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있음. 이에 대해 국가의 사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역할이 지배적이라는 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음.
- 공공부조 수급자를 지원하는 지역자활센터를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포함시킨 새누리당 안과 이를 제외한 야당 안도 대조적임. 독자 법인도 아니고 별도 재원도 거의 없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전달체계라는 점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실제 지역자활센터의 핵심 기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큐베이팅 및 지원이라는 점에서 제외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음.

**[1) 새누리당(안), 2) 새정치민주연합(안), 3) 정의당(안)]**  
(쟁점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만 발췌)

**1) 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에 따른 광역자활센터,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 및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2)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3)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총괄

-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인 사회적경제위원회를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할 것인지 국무총리실 소속 위원회로 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부처를 신설해야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위원 구성에 민간이 대폭 참여하면서 대통령 소속의 위원회가 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음.
- 법안 논의 초기에 중앙부처 중에서 어느 부처가 기본법을 총괄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많은 논의가 있었음. 정책 총괄을 위해서는 힘 있는 부처가 해야 한다는 근거에서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고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사회적경제와 다른 원리로 움직이는 시장경제를 책임지고 있으므로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있었음.
- 정부의 권한이 막강한 한국의 맥락에서 기획재정부 이외의 부처가 맡을 경우 실제 통합적 정책 추진이나 정책 조율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기본법을 맡는 부처는 기획재정부로 수렴되었음.
-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사무국을 별도로 설치해야 하는지 아니면 총괄중앙부처의 실국이 사무국 역할까지 함께 할 것인지에 대해 쟁점이 형성되어 있음. 행정조직이 비대해져서 재정 지출이 커진다는 주장과 기획재정부 실국이 맡을 경우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결정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음.
- 실제 정책 사업을 실행할 공공기관인 사회적경제원의 총괄을 기획재정부가 독점해야 한다는 새누리당 안과 고용노동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등 사회적경제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 부처들이 공동으로 해야 한다는 야당안이 대립되고 있음.

- 사회적경제원의 기능에서도 여당안은 많은 역할과 기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야당안에서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연합체들이 해당 기능 중 많은 것을 하도록 규정하여 민간의 주도성을 강조하고 있음.
- 기획재정부가 맡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더라도 시장경제 중심의 철학을 가진 기획재정부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을 얼마나 견제해야 하느냐를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됨.

### **[1) 새누리당(안), 2) 새정치민주연합(안), 3) 정의당(안)]**

(쟁점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만 발췌)

**1) 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사회적경제의 발전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3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이 된다.

③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사회적경제조직의 근로자, 사용자 등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사무국을 둔다.

제15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사업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 경제원” 이라 한다)을 둔다.

④ 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 양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
3. 사회적경제조직의 사회적 가치 측정평가도구 개발
4. 사회적경제조직의 모니터링 및 평가
5. 사회적경제조직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참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6. 업종·지역 및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7. 사회적경제 조직 홈페이지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8. 경영·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9. 사회적경제조직 판로개척 지원
10.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국제교류 협력
11.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인적·물적 자원의 기부, 자원봉사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  
를 위한 민간의 참여활동 지원
12.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제2조 제3호 “가”목으로부터  
“마”목까지의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2) 제8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기반 사회적경제 개발과 협력을 증진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공동체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9조제1항에 따른 부문별 발전계획안과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도 지역별발전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4년을 단위로 하는 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제15조(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국가정책과 기본계획, 그리고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고 민· 관 공동협력과 교류를 촉진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간에 조화로운 정책추진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사무처 설치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민간위원, 국회추천위원, 민· 관 상임위원 각 1인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민· 관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며 공동위원장에는 정부측을 대표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측을 대표해서는 제3항제2호의 민간위원 중에서 추천된 민간대표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한다.

③ 2. 민간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

가. 지역· 부문· 분야·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나.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과 신뢰가 있는 사람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무처를 두며,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국가공무원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⑨ 정부는 위원회의 사무처 업무를 지원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 도 지사가 시· 도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시행하고 관련 정책의 협의· 조정 및 관련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인 기획재정부에 사회적경제정책국을 두고,



그 밖의 관계중앙행정기관과 시·도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경제과를 둘 수 있다.

제23조(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의 설립 등) ① 기획재정부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기관으로 고용노동부와 안전행정부등 관계부처의 공동출연을 받아 한국사회적경제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현황에 대한 조사연구 및 빅 데이터 구축
2.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개발과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3.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과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책평가사업
4. 사회적경제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계관리
5.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지원 및 공공조달센터 구축사업
6. 사회적경제 창업보육시스템 개발과 민간자원연계사업
7. 사회적경제 전달체계 구축·운영과 중간지원조직 육성사업
8. 사회적경제조직과의 교류·협력사업 및 생태계 조성 지원사업
9. 사회적가치 평가 지표 개발 및 사회적 투자 및 신용대출 기준의 개발사업
10. 사회적경제의 교육홍보와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사업
11. 사회적경제 인재 육성사업과 초·중등학교 및 시민사회 교육개발 사업
12.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제3조 제3호의 가목부터 마목까지 사회적경제기업과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13.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4.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⑤ 개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민간단체의 참여를 확대하여 제4항제7호 및 8호의 중간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제6조(사회적경제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회적경제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사회적경제의 개발 및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① 사회적경제 발전과 관련한 주요정책 및 기본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의 조화로운 정책 추진 등을 총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인으로 하고 위원

은 정부위원, 민간위원, 전문가위원을 합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추천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상근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민간위원 중 추천된 1인으로 한다.

④ 2. 민간위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대표하는 사람

⑦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에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사무국을 둔다.

제19조(한국사회적경제원의 설립 등) ①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및 기획재정부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하여 결정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발전에 관한 집행업무를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사회적경제원(이하 “사회적경제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⑤ 사회적경제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학술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2. 사회적경제 현황 조사 및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3. 연합조직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컨설팅·판로개척·연대강화 사업 지원을 위한 자원 배분
4.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
5.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 ○ 사회적경제 지원 관련 정책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외국의 기본법과 달리 한국의 사회적경제 기본법안에는 지원과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새누리당 안은 직접적으로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이 법에 기초하여 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조문이 구성되어 있음. 야당안은 유사하게 지원 내용을 명시하되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원정책별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 기본법의 성격을 감안할 때 야당안이 논리적으로 타당함.
- 하나의 기본법을 통해서 일정한 가시적 정책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여당안에 비교할 때 야당안은 기본법에 기초한 사회적경제 관련 법률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야심차고 거대한 기획임.
- 여당 내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에 대한 논란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여러 개의 후속 특별법안의 제정을 여당이 약속할 수 있을 것인가는 미지수임.

**[1) 새누리당(안), 2) 새정치민주연합(안), 3) 정의당(안)]**

(쟁점내용에 해당하는 일부 부분만 발췌)

**1) 제17조(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의 금융기반 조성과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1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2) 제26조(사회적금융의 제도정비)** ④ 정부는 사회적경제발전에 필요한 민간 사회투자기금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다.

제28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조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발전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조성한다.

제33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용역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⑥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책임조달원리를 구현하고 공공기관 우선구매 및 공공서비스 민간위탁 등 공공조달을 확대하기 위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도록 한다.

**3) 제22조(사회적경제발전기금의 설치 및 조성)** ① 정부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26조(공공기관의 우선구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이하 “사회적경제조직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용역 및 공사에 관한 조달계약

이나 위탁계약 과정에서 사회적 목적을 구현하는 사회적책임조달원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거나 제2항의 사회적책임조달의 원리가 구현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 맺음말

-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새로 제정될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회적 경제의 사회적 인정(recognition)을 선언함을 주요 목적으로 해야 함.
  - 사회적경제조직은 정책과 사업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 아닌 원칙에 의해 정의되어야 함. 사회적 경제 조직의 기본 원칙을 천명하여 유사 조직과 형식이 아닌 실질적 구분을 제시해야 함.
  -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정부의 공익적 목표로 선언하는 내용도 포함되어야 함.
- 여야 모두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에 동의하고 있으므로 법안의 통과 그 자체보다는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더 중요함.
  - 여당 안은 논의를 촉발하고 구체화시킨 안이라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수 있으나 국회의 수정 대안이 여당 주도로 확정되는 것은 부적절함. 야당 안은 후발자로서의 이득을 누리면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안이라는 점에서 존중될 필요가 있음.
  - 국회의 수정 대안 논의 속에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의견이 좀 더 반영될 수 있는 절차와 과정이 필요함.